

# 2023년도 서부소방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공 개 용)

2023. 6.



INCHEON FIRE DEPARTMENT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2023년 서부소방서 종합감사 처분요구

## □ 총괄 현황

[단위 : 건, 천원, 명]

총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기관 경고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소계	회수	소급	기타	소계	징계	경고	주의	
25	20	10	9	1	4	1,329	2,534	445	1	-	-	1	-

## □ 처분요구 목록

※ 처분 심의회(23. 6. 15.) 결과 반영

연번	분야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 치
				방법	금액(원)	
1	행정	호봉 재획정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소급	2,534,010	
2	〃	연가 사용 및 관리·감독 소홀	주의	회수	989,690	
3	〃	(소방) 경고 등 처분대상 관리 부적정	시정			
4	〃	공문서(생산문서) 사무전결처리 부적정	주의			
5	회계	출장 여비 지급 업무 부적정	시정	회수	340,000	
6	〃	보통예금 계좌관리 부적정	시정			
7	〃	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 부적정	주의			
8	〃	지역개발채권 매입징수 소홀	시정	징구	445,000	
9	〃	시설공사 하자 최종검사 소홀	주의			
10	예방	건축허가 동의 처리업무 소홀	주의			
11	〃	소방시설공사 완공업무 시 내진설비 적용 검토 소홀	주의			
12	〃	위험물제조소등 등록면허세 등 관련 업무 소홀	시정			
13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주의
14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소홀	시정			
15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6	대응	의료용 산소 용기(구급차 적재용) 충전 업무 소홀	주의			
17	〃	유관기관 구급활동 자료 제공 업무 부적정	주의			
18	〃	퇴직(면직)자 개인보호장비 관리 소홀	시정			
19	〃	개인 호흡보호장비 공기 충전 등 관리 소홀	시정			
20	〃	화재조사 감식·감정 장비 보유 등 관리 부적정	권고			

[일련번호 1]

# 인 천 소 방 본 부

## 시정 요구

제 목 호봉 재획정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2항 단서조항에는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호봉 재획정 시기는 호봉을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 복직일에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서부소방서 복직자 총 21명(21년 3명, 22년 15명, 23년 3명)의 호봉 내역을 확인한 바, 소방○ ○○○, 소방○ ○○○ 등 육아휴직자 2명에 대해 휴직 기간을 산입한 호봉 재획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와 같다.

[표] 호봉 재획정 부적정 현황

연번	계급	성명	휴직기간	호봉 재획정일	호봉 정정기간 /소급내역(원)	정정(예정) 내역
1	소방○	○○○	21. ○ ○ ~ 22. ○ ○	22. ○ .○. (승급:10월)	22. ○ ~ 23. ○(12개월) /2,534,010	기지급 6호봉 재획정 후 7호봉 현재 8호봉(22.10. 승급)
2	소방○	○○○	22. ○ ○ ~ 22. ○ ○	22. ○. ○. (승급:10월)	22. ○ ○ ~ 22. ○ ○(1개월) /없음	기지급 10호봉 재획정 후 11호봉이나 승진(22.12.1.) 시 호봉 차감으로 정정 필요 없음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시 정] 육아휴직 복직자 소방○ ○○○에 대해 호봉 재확정 및 근무년수 정정에 따른 본봉 및 수당을 소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지침)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호봉 확정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 인 천 소 방 본 부

## 주의 요구

제 목 연가 사용 및 관리·감독 소홀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각 과(단), 119안전센터(구조대)장

[내 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점검)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유연 근무, 당직, 휴가 및 출장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개인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5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고, 동 규정 제16조의3(연가의 저축)에 따르면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부소방서 행정팀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개인별 연가 사용 실태를 점검하여 연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차감되지 않은 일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차감되지 않은 일수에 대해 해당 연도 연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연가 저축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소방서 소속 직원의 개인별 연가 사용 현황을 확인한바, 소방○ ○○○ 등 10명에 대하여 2022년도에 부여된 연간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연가를 부적정하게 저축하여 처리하였고, 소방○ ○○○ 등 2명이 2023년도에 사용한 연가가 차감되지 않는 등 연가 사용과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 연가 사용일수(시간) 미 차감 사유 】

- 근무일 상태에서 연가를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연가가 차감됨
  - ▶ 서무 등 담당자가 e-사람 근무일지(일일근무계획)에 대직자를 당번자로 변경함과 동시에 근무자를 비번자로 변경하는 경우
  - ※ e-사람 시스템이 연가 사용 근무자를 비번자로 인식하여 연가일수가 차감되지 않음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각 과(단)장, 119안전센터(구조대)장)은

**[주 의]** ①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의 회수 및 저축 연가 일수를 차감해 주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복무 상신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각 과(단)장, 119안전센터(구조대)장은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e-사람 시스템 매뉴얼 자체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개인 연가 사용에 대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표] 연가 미차감 대상자 내역 및 조치사항

연번	연도	소속	성명	사용일	조치사항
1	2022	○○○○단	○○○	주간 2일	연가보상비 회수 (2일분 : 201,830원)
2	2022	○○○○단	○○○	주간 4일	연가보상비 회수 (4일분 : 305,000원)
3	2022	○○119안전센터	○○○	주간 2일	연가보상비 회수 (2일분 : 237,280원)
4	2022	○○119안전센터	○○○	주간 1일	연가 저축 차감
5	2022	○○119안전센터	○○○	주간 1일	연가 저축 차감
6	2022	○○119안전센터	○○○	주간 1일	2023년도 연가일수 1일 차감
7	2022	○○119안전센터	○○○	주간 1일	저축 연가 사용 취소 및 저축일수 1일 차감
8	2022	○○119안전센터	○○○	주간 1일	연가 저축 차감
9	2022	○○○○○대	○○○	조퇴 0:45	저축 연가 사용 취소 및 저축일수 1일 차감
10	2022	○○○○○○○ ○○○○대	○○○	전일 2일 2:00	연가보상비 회수 (2일분 : 245,580원)
11	2023	○○119안전센터	○○○	주간 1일	사후 연가 차감
12	2023	○○119안전센터	○○○	주간 1일	사후 연가 차감

[일련번호 3]

# 인 천 소 방 본 부

## 시정 요구

제 목 (소방) 경고 등 처분대장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 [내 용]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처분기록의 삭제)에 따르면 경고·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호 서식의 경고 등 처분 대장에 등재된 경고·주의의 기록을 삭제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경고·주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경고·주의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3. 경고·주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동 규정상 기록삭제의 목적<sup>1)</sup>은 경고·주의를 받은 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된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경고 등 처분 대장에 등재된 관계 기록 때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고, 기록삭제의 방법<sup>2)</sup>은 경고 등 처분 대장에 등재된 당해 경고·주의의 기록을 삭제 표시한 후 비고란에 그 사유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단, 동 규정 제8조제2호에 해당하여 경고·주의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처분대장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예시1) “2000. 1. 1.자로 삭제함”(기록유지기간 경과)

(예시2)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1995.12. 2.)에 의거 사면”

1),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2장(인사혁신처 예규, 2023.1.31.)



이와 관련하여 서부소방서 경고 등 처분 대장을 확인한바, 기록유지기간이 경과한 6명(21년 5건, 22년 1건)에 대하여 경고·주의 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시정]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처분기록의 삭제)에 따라 해당하는 소속 직원의 기록을 삭제하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등 처분 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 인 천 소 방 본 부

## 주의 요구

제 목 공문서(생산문서) 사무전결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각 과(단), 119안전센터(구조대)

### [내 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에 따르면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동 규칙 제10조(산하기관)에는 시 산하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처리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방본부 산하 직속기관에서는 「소방서 등 직속기관 사무 전결처리 준칙」<sup>3)</sup>에 따라 전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소방서 등 직속기관 사무 전결처리 준칙」상 전결권 현황은 [표]와 같고, 그 중 실무자 전결권<sup>4)</sup>은 ‘①민원처리에 관한 사항(마. 즉시민원 처리) 중 제증명 등 발급, ②기타 일반사항 중 아. 각종 간행물의 배부, ③기타 일반사항 중 차. 단순 취합 보고문서’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소방본부 소방행정과-9669(2023.5.16.)호 「직속기관 사무 전결처리 준칙」 시달

4) 감사 수감 기간인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무자 전결권은 개정 없이 동일함.

[표4] 소방서 등 직속기관 전결권 현황

구분	계	실무	담당	과장	기관장
합계(%)	1,142 (100%)	12 (1%)	184 (16%)	618 (54%)	328 (29%)
소방서	426	3	86	210	127
소방학교	277	3	36	155	83
119특수대응단	232	3	34	133	62
인천국민안전체험관	207	3	28	120	56

이와 관련하여 서부소방서 공문서(생산문서) 사무전결처리 현황을 확인한바, 21년 3건, 22년 12건, 23년 5건의 생산문서를 실무자 전결처리 사항이 아님에도 결재 처리하거나, 1인 결재 후 다시 문서를 재기안하여 결재를 받는 등 「소방서 등 직속기관 사무 전결처리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문서를 생산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각 과(단)장, 119안전센터(구조대)장)은

**[주 의]** 「소방서 등 직속기관 사무전결 처리 준칙」에 따라 실무자 전결처리가 가능한 문서 외에는 전결(결제) 규정을 준수하여 문서생산 및 처리해 주시고, 소속 직원에 대해 관계 법령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 인 천 소 방 본 부

## 시정(회수) 요구

제 목 출장 여비 지급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는 근무지내 국내 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이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에서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고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소방서에서는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직원에게 2만원의 출장 여비를 초과 지급하였으며, 2회의 출장을 간 직원에게는 각각 2만원씩 4만원을 중복 지급하여 1일 출장 여비 지급 기준액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시 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 여비 340,000원을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 인 천 소 방 본 부

## 시정 요구

제 목 보통예금 계좌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2(계좌의 개설·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계좌의 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훈령 별표 3(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서는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 회계부서장은 주기적(사업부서장 분기별, 관서별 지출원 반기별, 회계부서장 연 1회 이상)으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지 않은 계좌는 해지하거나 통·폐합 조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업부서는 사업종료 등으로 계좌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계좌를 해지하고 회계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소방서는 신설소방서 개서<sup>5)</sup>에 따라 관할이 변경되는 ○○·○○·○○119 안전센터의 보통예금계좌를 관할 변경이 이루어지는 날 즉시 해지 처리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보통예금계좌 운영·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5) 검단소방서 개서 : 2023.01.30.(월)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 [주 의] ① 신설 소방서 개서에 따라 관할이 변경된 ○○·○○·○○119안전센터의 보통예금계좌를 해지처리 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서부소방서명의로의 보통예금계좌 개설 및 운영·관리 시 회계처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 인천소방본부

## 주의 요구

제 목 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 부적정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3항에 따르면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1항에 따르면 ‘주관과장이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소방서에서는 상기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수물품내역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물품을 아래 표와 같이 부적정하게 구매하였으며, 구매한 물품을 사후 정수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정수관리대상 물품을 부적정하게 취득·사용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주 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에 있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시어 정수 책정 승인 이후 예산편성·취득 하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 시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포함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2021년 ~ 2023년 정수승인 대비 취득물품 현황

(단위 : 원)

연번	정수승인 물품(수량)	정수 요청일자	취득물품	취득일자	비고
1	냉방기(7개)	2020.08.24.	냉방기 8개, 난방기 3개	2021.06.14.	
2	냉난방기(4개)	2022.08.10.	냉방기 2개, 냉난방기 2개	2023.02.21.	
3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8개)	2022.08.2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17개	2023.03.09.	

[일련번호 8]

# 인천소방본부

## 시정(징구) 요구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 징수 소홀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및 [별표 1]6)에 의하면 ‘자동차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채권의 매입금액은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고, 4,500원의 경우는 면제, 13,800원의 경우는 10,000원, 258,000원의 경우 255,000원으로 매입금액을 정하고 있어 계약담당자는 대금청구 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는 ○○119안전센터 옥상 방수공사 등 22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과다·과소 및 미징구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6)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 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계약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그 외 기간은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한다. (2023년 3월 1일부터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시 정] 공기충전기 안전밸브 성능시험 업체 등 3개소에 대하여 과소·미징구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445,000원을 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 인 천 소 방 본 부

## 주의 요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 최종검사 소홀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소방행정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 “3” 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서부소방서의 감사 기간 중 하자검사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등 17개소 공사에 대해 2021년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최종검사를 미 실시 하는 등 총 19개소 공사에 대해 기간 내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검사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시설물의 결함 확인 및 해당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

**[주 의]** 효율적인 하자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계약의 성질상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에 하자보증서 등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담당 직원을 감독하여 하자검사 대상 목록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 인 천 소 방 본 부

## 주의 요구

제 목 건축허가 동의 처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예방안전과

[내 용]

「소방시설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3항에 따르면 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예방법」 영 별표 4 제1호 가목<sup>7)</su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항에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 건물 등 3개소에 대하여 기한 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지 않았으며, (재)○○○○○○○ 건물 등 6개소에 대하여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반려하여야 함에도 반려 처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7)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가목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50층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이상 ② 30층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이상 ③ 연면적 10만㎡ 이상(아파트 제외)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은

[주 의]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 인 천 소 방 본 부

## 주의 요구

제 목 소방시설공사 완공업무 시 내진설비 적용 검토 소홀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예방안전과

### [내 용]

「소방시설법」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제1항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다음 각 호<sup>8)</sup>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 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8)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 첨부서류

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②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 1부

③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1부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주택법」 제49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그리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소방시설 종합점검표의 준용)에 따라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2021. 2. 19. 개정됨에 따라 소방청에서 시달된 내진설비 성능시험조사표 적용에 관한 업무 지침<sup>9)</sup>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개정 이전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인 ○○○○○○ 건물을 기존 서식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서식으로 작성된 성능시험조사표를 검토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은

[주 의] 개정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완공검사 등)에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조사표를 재검토하시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개정된)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적용시점 등 알림-市 예방안전과, 7179(2021.04.27.)

[일련번호 12]

# 인 천 소 방 본 부

## 시정 요구

제 목 위험물제조소등 등록면허세 등 관련 업무 소홀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예방안전과

### [내 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처리결과의 통보)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설치·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 신청, 제7조의 변경허가 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 또는 제23조의2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구조설비명세표(설치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에 한함)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4조(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 등) 제2항제2호에 따라 신허가청에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변경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동탱크 저장소 관할 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변경허가 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부여 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신고납부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의 민원 처리결과를 관할 관련기관(기후에너지과)에 ○○○○○○ 등 7개소를 미통보, ○○○○○○○○의 관할 변경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구허가청(○○○○소방서)에 통보하지 않았고 ○○○○○○ 등 3개소에 대한 용도폐지 처리결과를 관할 등록면허세 담당 부서(세무과)에 전 설치자가 정기 등록면허세가 부과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면허취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은

[주 의] 이동탱크저장소의 변경사항 등 처리결과 미통보 대상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용도폐지된 3개소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담당부서에 면허취소를 통보하여 정기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3]

# 인 천 소 방 본 부

##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예방안전과

[내 용]

「화재예방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한 위반 현황<sup>10)</sup>

대상명	주 소	업종/등급	소유자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일자	신고일자	초과일자
○○○ ○○○○	서구 ○○로○○번길○○	공장/○급	○○○	○○○	2022.11.21	2022.12.06	1일

10) 화재예방법 시행령[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과태료 50만원)

그러나 서부소방서에서는 ○○○○○○○○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표]와 같이  
 선임 기한을 1일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나, 법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선임 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은

[시 정] 화재예방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적의 조치 하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에 대하여 관계인이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  
 합니다.

#### (관련자)

서부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

[일련번호 14]

# 인 천 소 방 본 부

## 주의 요구

제 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소홀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예방안전과

[내 용]

「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한 때에는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자체점검 결과 소방시설등의 불량 등으로 조치명령이 발부된 ○○○○○○○○○ 등 23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 이행여부 현지확인을 누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은

[주 의]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조치명령 현장확인이 누락된 23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5]

# 인 천 소 방 본 부

## 주의 요구

제 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예방안전과

[내 용]

「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6항에 따르면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제1항에서는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소방서에서는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중 1년간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이 연기 된 ○○○○○○ 건물에 대해 연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기 기간의 만료 3일전 까지(22. 2. 13.까지) 관계인으로부터 자체점검 연장 신청을 받아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나, 22. 11. 21. 연기신청을 접수 및 처리함으로써 규정보다 기간을 초과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연기를 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은

[주 의]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업무처리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6]

# 인 천 소 방 본 부

## 주의 요구

제 목 의료용 산소 용기(구급차 적재용) 충전 업무 소홀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119재난대응과

## [내 용]

서부소방서는 119재난대응과는 구급차에 적재하여 사용하는 의료용 산소 용기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소모한 산소를 충전하고 분기 단위로 비용을 결재하고 있다.

\* (주)○○○○○○○○(인천 서구)

[표] 의료용 산소 용기 충전 현황

구 분	2.8L 산소용기				10.3L 산소용기			
	충전(회)	용기(개)	단가(원)	비용(원)	충전(회)	용기(개)	단가(원)	비용(원)
2022년	47	163	10,700	1,744,100	47	415	12,800	5,312,000
2023년 1분기	8	37	13,400	449,900	8	57	13,922	793,600

※ 서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장비관리법」 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및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구급대 장비 보유기준) 따르면 응급처치장비(호흡유지기구)로 자동식 산소 소생기(고정용, 휴대용)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장비관리법」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수)에 따르면 ‘물품구매등을 요구한 부서의 장은 그 물품 등을 인수할 때에 반드시 검수하여 정당하게 납품된 것을 확인하고, 지출요청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서부소방서 각 119안전센터에서 응급환자 처치시 사용하여 재충전이 필요한 의료용 산소 용기를 ○○119안전센터(직할) 창고에서 보관하다가 주 1~2회 지정 업체가 이를 수거하여 산소를 충전하고 다시 상기 장소에 입고하면 각 119안전센터의 구급차가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충전이 필요한 의료용 산소 용기를 지정 장소로 입고하고 외부 업체에 충전 의뢰시 해당 일의 직할센터 구급대원 1인이 이를 확인할 뿐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입출고 관리대장 작성 및 산소 충전 후 충전 적정 여부, 거래 명세서 확인 등 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계부서 의견 등

○○○○○○○○과 ○○○○○팀에서는 「산소용기 충전 입출고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119안전센터마다 구급 산소용기 충전 입출고 대장을 만들어 현황을 확인할 것이며, 소진된 산소 용기가 일정 수량 발생하면 구급팀에서 이를 확인하고 충전요청 하여 충전이 완료된 용기에 대해 직접 검수할 것입니다. 비용지출 결재 시 산소용기 충전 입출고 대장을 첨부하여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119재난대응과장)은

[주 의] 구급차 적재용 의료용 산소용기의 용기 검사 및 산소 충전시 업무 담당자(정·부)를 명확히 지정하여 입출고 관리대장 작성 및 검수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7]

# 인 천 소 방 본 부

## 주의 요구

제 목 유관기관 구급활동 자료 제공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119재난대응과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에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르면 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④ 가 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점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소방서에서는 종합감사 기간(2021년 5월 ~ 2023년 4월)동안 유관기관(○○○○○○○○ 등)에서 관련법령<sup>11)</sup>에 의하여 요청한 구급활동 자료 431건에 대해 구급활동일지 원본을 사본(스캔)하여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회신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 유관기관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인천 전체 소방서(11개)의 관련 업무처리 현황을 확인 한 바, ○○·○○○소방서만 구급활동일지 사본 제공하고, 나머지 소방서는 일지의 필요사항(성별, 출동일시·장소, 평가소견, 이송의료기관)만 발췌 및 재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119재난대응과장)은

[주 의] 유관기관 구급활동자료 제공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1)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 제공의 요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일련번호 18]

# 인 천 소 방 본 부

## 시정 요구

제 목 퇴직(면직)자 개인보호장비 관리 소홀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119재난대응과

[내 용]

「소방장비관리법」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불용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따르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9조(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입력)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여 신규 배치 또는 지급하거나, 수리 및 불용 등 관리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 또는 변경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서부소방서에서는 종합감사 수감 기관동안 퇴직 및 면직을 한 소속 직원 직원 14명 중 5명의 개인보호장비에 대하여 불용 심의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119재난대응과장)은

[주 의] 퇴직 및 면직한 직원의 개인보호장비를 관련 규정에 의거 불용심의 등을 실시하여 처리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9]

# 인 천 소 방 본 부

## 시정 요구

제 목 개인 호흡보호장비 공기 충전 등 관리 소홀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119재난대응과

[내 용]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5조(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별표7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6개월마다 공기를 배출한 후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여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따르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7조 3항 소방장비의 기록·관리 및 확인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 소방장비 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부소방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 호흡보호장비의 고압용기를 6개월마다 공기를 배출한 후 새로운 공기를 충전 완료하고 해당 내용을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했으나, 보유중인 729개의 고압용기 중 76개의 고압용기가 충전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기존 공기를 배출 후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해당 내용을 소방장비 관리시스템 기재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119재난대응과장)은

[주 의] 부적정한 개인 호흡보호장비 고압용기(76개)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기 충전 등을 실시하고 또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 인 천 소 방 본 부

## 권고(개선)

제 목 화재조사 감식·감정 장비 보유 등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서부소방서

관 계 부 서 현장대응단

[내 용]

「화재조사법」 제6조(화재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화재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관리하고 화재조사 관련 기술개발과 화재조사관의 역량증진 그리고 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관리와 운영을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운영)에서는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에 화재조사관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전담부서에는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소방서 화재조사팀에서는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감정 장비를 보유기준 대비 64종(67%)을 보유하였으며, 이 보유장비 중 27종은 내용연수를 짧게는 1년 길게는 14년을 경과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기준대비 서부소방서 화재조사팀 장비와 시설 현황

구 분	계	발굴 용구	기록용 기기	감식 기기	감정용 기기	조명 기기	안전 장비	증거 수집 장비	화재 조사 차량	보조 장비	화재 조사 분석실	분석실 장비
기준(중)	96	8	13	16	21	5	8	6	2	6	1	10
보유(중)	64	6	9	12	4	4	8	5	1	5	1	9

※ 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부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은

[권고(개선)]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보유율 향상 위하여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과학적인 화재원인 분석과 화재조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현재 보유중인 노후된 감식·감정 장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교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